

신 규 항 만 기 본 계 획 (진 촌 항)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3. 8.



해양수산부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가. 계획의 배경

- 진촌항은 “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2021.03.~04., 해양수산부)”에 따라 지방어항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어항이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항만법 시행령」 개정, 2022.07.)되어 이에 대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기존 항내 지속적인 개발사업(어촌뉴딜 300사업, 요트계류시설 조성 등)을 통해 관광인프라 확충과 이용객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음
- 수용예측을 통해 2040년까지 여객, 차량, 화물 수송량 증가율이 크지는 않으나 꾸준히 증가 추세임이 확인되며, 관광객·도서민의 원활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차도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실정임
- 특히, 진촌항을 이용하는 재적 및 외래어선은 대부분 3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항내 부잔교 시설을 통해 어업활동을 수행 중에 있으나 진촌항을 이용하는 총 어선 척수에 비해 소형 접안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신규 직립식 소형선 부두 개축이 필요함
- 또한, 어선의 수리 및 대피 공간(선양장)을 확보하여 어업기능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항내 정온도 불량에 따른 선박의 접안 및 통행 안정성 우려로 동방파제를 100m 연장하는 계획이 필요함

나. 계획의 목적

- 기본목표
 - 신규 지방관리 연안항 지정에 따른 여객, 화물, 어업의 복합기능 항만으로 육성
- 세부 육성 전략
 - 동방파제 연장(L=100m)을 통한 항내 정온유지 및 항만활동 환경 개선
 - 여객 및 차도선부두 확충(L=120m)을 통해 관광객·도서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
 - 직립식 소형선부두(L=174m) 및 선양장(L=40m) 개축

1.2 계획의 추진근거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등

가.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 항만기본계획의 수립은 「항만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같은 법 제7조에 의거하여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표 1.2-1>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 개발·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자료 :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 제8조

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고시 의제

- 「항만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봄

<표 1.2-2>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따른 의제사항

제98조(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2. 제44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자료 : 「항만법」 제98조제2항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함
- 또한, 「항만법」 제85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수립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의제되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함

<표 1.2-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라. 항만의 건설사업	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 계획	「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차. 개간공유 수면 매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계획면적 : 총 21,027㎡ [기존 시설 14,354㎡ + 신규 시설 6,676㎡]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

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생략 근거

- 본 계획의 규모는 6만㎡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절차는 생략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함

<표 1.2-4>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생략 근거

환경영향 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가. 추진경위

- 1992.02.23. : 진촌항 지방어항 지정
- 1994.02.17. : 진촌항 개발계획 수립
- 2015.08.20. : 진촌항(지방어항) 개발(정비)계획 변경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5-368호]
- 2019.05.09. : 통영시 어촌뉴딜 300사업(산등항 등 5구역) 기본 및 실시설계
- 2020.10.22. : 통영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그림 1.3-1) 진촌항 지형도면고시도 참조]
- 2021.03.~04. : 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
- 2021.05. : 역마리나 요트계류시설(능양항, 진촌항) 조성사업 준공
- 2021.06.28. :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2021.12.14. : 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022.03. : 진촌항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

- 2022.07.04. :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
 -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 격렬비열도항
 - 지방관리연안항 지정 : 진촌항
- 2022.07.27. : 신규 항만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3.08.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나. 향후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제출
- 주민 등의 의견수렴(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 신규 항만기본계획 고시(해양수산부)

1.4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신규 항만 기본계획(진촌항)

나. 계획의 수립 및 승인기관

- 해양수산부장관

다. 협의기관

- 환경부장관

라.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4년
- 목표연도 : 2030년

2)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 금평리 일원

마. 계획의 규모

- 본 계획대상지인 진촌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전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의 지정’이 완료(1992.02.23.)되어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는 기존 어항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전체 개발기본계획 규모를 대상으로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규모 : 21,027㎡

가) 기존 시설 : 14,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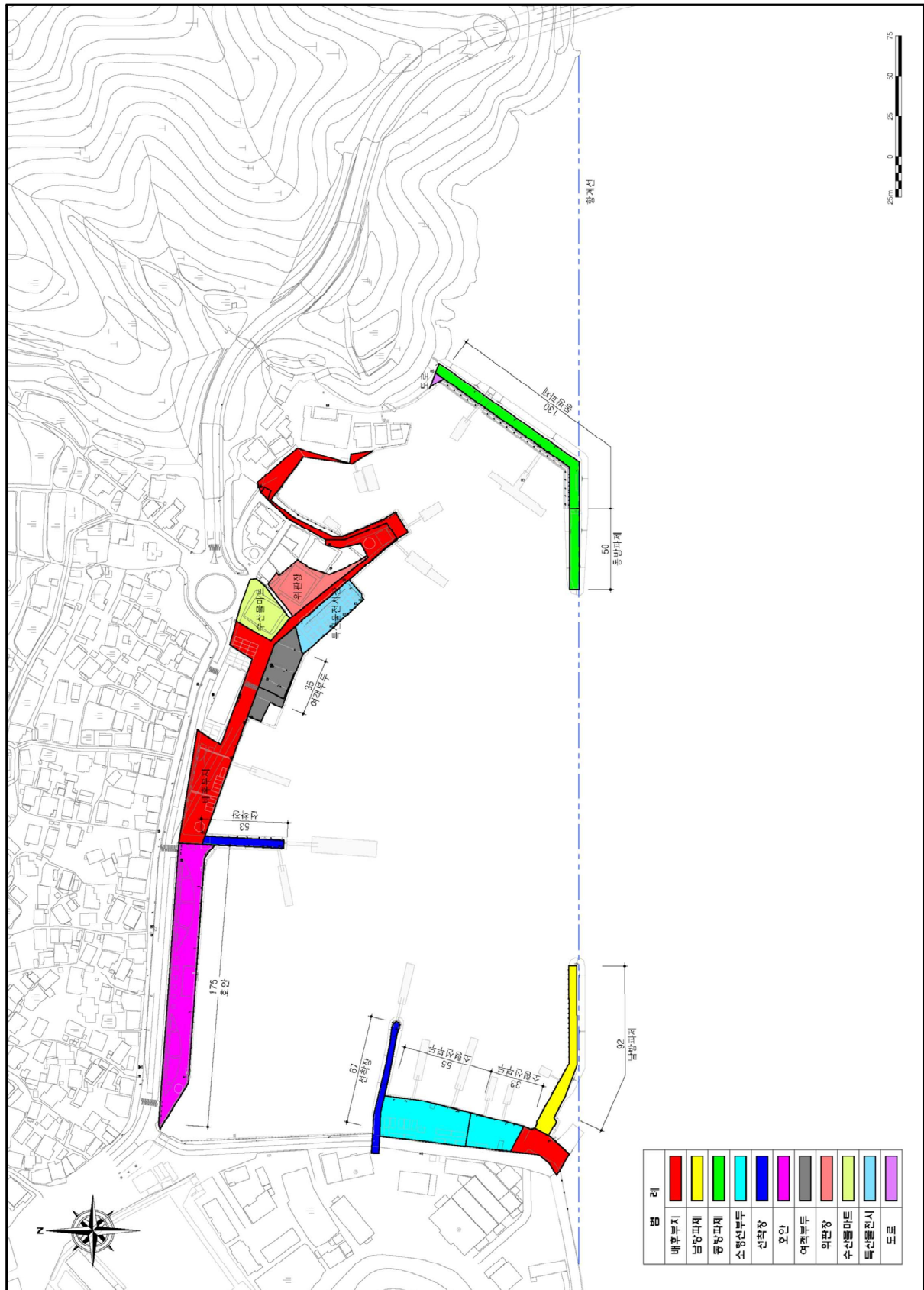
- 기존 어항시설 : 109,830㎡(육역 14,354㎡ + 해역 95,476㎡)

나) 신규 시설 : 6,676㎡

- 공유수면매립 반영 요청 면적 : 6,676㎡
 - 외곽시설 : 100m(675㎡)
 - 계류시설 : 334m(6,001㎡)
 - 기 타 : 준설 1식

<표 1.4-1> 계획 규모

구 분		계 획 규 모					비 고
		기존 시설			신규시설	합계	
		고시면적	지번 미등록지	계			
시설 규모 (m)	외곽시설	92	180	272	100	372	
	남방파제	92	-	92	-	92	
	동방파제	-	180	180	100	280	· 100m 연장 · 기존시설 135m 증고
	계류시설	385	33	418	334	752	
	소형선부두	55	33	88	174	262	· 174m 개축
	선착장	120	-	120	-	-	· 타시설로 전환
	호안	175	-	175	-	115	· 타시설로 인한 축소
	여객부두	35	-	35	30	30	· 기존 부두는 소형선 부두로 기능 전환 · 30m 개축
	차도선부두	-	-	-	90	90	· 90m 개축 (기존 선착장 포함)
	선양장	-	-	-	40	40	· 40m 개축
시설 면적 (㎡)	계	11,900	2,454	14,354	6,676	21,027	· 매립 반영 요청 면적 총 6,676㎡
	기본시설	4,253	-	4,253	-	4,253	
	배후부지	4,253	-	4,253	-	4,253	
	외곽시설	648	1,101	1,749	675	2,424	
	남방파제	648	-	648	-	648	
	동방파제	-	1,101	1,101	675	1,776	· 매립 반영 요청 면적 675㎡
	계류시설	5,453	577	6,030	6,001	12,031	
	소형선부두	1,291	577	1,868	885	2,753	· 매립 반영 요청 면적 885㎡
	선착장	560	-	560	-	560	
	호안	2,709	-	2,709	-	2,709	
	여객부두	893	-	893	3,095	3,988	· 매립 반영 요청 면적 3,095㎡
	차도선부두	-	-	-	1,355	1,355	· 매립 반영 요청 면적 1,355㎡
	선양장	-	-	-	666	666	· 매립 반영 요청 면적 666㎡
	기능지원시설	718	1,576	2,294	-	2,294	
	위판장	-	828	828	-	828	
	수산물 마트	718	-	718	-	718	
	특산물 전시장	-	748	748	-	748	
	임항교통시설	-	28	28	-	28	
	도로	-	28	28	-	28	
기타	준설	-	-	-	1식	1식	



(그림 1.4-1) 계획평면도(기존시설)

– 11 –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보전목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환경보전목표의 설정)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평가 분야 또는 항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정량적으로 수립한 목표를 말함

<표 2-1> 환경보전목표 설정 근거

구 분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p>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p> <p>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p>제7조의2(환경보전목표의 설정)</p> <p>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환경보전목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등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 2.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대기·수질환경·탄소중립 등 국가의 분야별 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3. 시·도환경계획, 시·군·구환경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등 해당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4.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등 국내·외에서 적용·활용 중인 다양한 계획기법 및 정책 목표 5.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설정한 기준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환경보전목표 등

- 본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는 법 제5조, 작성규정 제7조의2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에 준하여 설정하였음

<표 2-2>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설정내용
1	환경기준	입지의 타당성	수환경의 보전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 해수수질 기준 유지 - 생활환경기준 -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대한해협연안 적용) -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중 단기기준 -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 해양퇴적물 기준(주의기준 이하) 유지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 소음진동)	○ 대기환경기준 유지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 환경기준 -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대기 환경기준 ○ 소음·진동환경기준 및 규제기준 유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생태·자연도(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 해양생태도(2등급) 보전 및 변화 최소화
2	생태·자연도	계획의 적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 수질)	○ 해당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보전특별 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음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음
3	오염총량기준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 계획비교, 입지 대안 설정 및 최적안 선정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적정성	○ 국가 환경계획 준수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5	국가 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입지의 타당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적정성	○ 지역 환경계획 준수 - 통영시 환경보전계획(2021~2025)
6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해당 없음 -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환경생태계획 수립 대상 계획에 해당하지 않음
7	계획기법 및 정책 목표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환경기준 부합성(온실가스)	○ 국제환경협약 준수 - 생물다양성협약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 확인·감시 및 보전조치 강구 - 기후변화협약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8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등에서 설정한 기준	-	-	○ 해당 없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절차 생략 (사업계획 규모 6만㎡ 이하)
9	협의회에서 결정된 환경보전목표 등	-	-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범위 설정

3.1 평가항목 선정

- 본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에 따라 계획 수립시 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함

<표 3.1-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사유

평가항목			선정여부	선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선정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포함여부와 기본방향 부합성 확보
	대안 설정 · 분석의 적정성		선정	· 대안검토를 통한 계획수립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보전	선정	· 생태·자연도, 각종 보호구역 분포 파악 · 육상 및 해양동식물상의 매립 등으로 인한 영향 · 자연환경자산 분포현황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선정	· 지형 · 지질 현황 및 입지특성 파악 · 매립으로 인한 조간대, 갯벌, 해안선 등의 지형 변화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선정	· 자연경관 현황 파악 · 계획에 따른 경관변화 분석
		수환경의 보전	선정	· 주변해역의 해양물리 현황 파악 · 계획시행에 따른 해수유동, 침식 및 퇴적, 해수교환율 변화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선정	· 대기질, 온실가스, 해양수질 및 퇴적물, 소음 · 진동 등 현황 조사 · 기상 : 타항목 예측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소음 · 진동, 해양 수질 및 퇴적물 영향 → 항목별 환경기준 부합여부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선정	·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영향 · 오수, 폐기물 처리계획은 환경기준 부합성(해양 수질 및 퇴적물)과 자원 ·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항목에서 제시
		자원 ·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선정	· 행정구역 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파악 · 공사인원 및 공사장비로 인한 각종 폐기물 발생 영향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선정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

3.2 평가범위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2022,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을 기초로 본 계획의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

<표 3.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 대상지역	설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 상위 및 관련 계획 포함여부와 기본방향 부합성 확보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대상지	· 대안검토를 통한 계획수립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육상 동식물상	· 계획대상지 경계기준 0.1~0.3km 내	· 계획시행시 육상동·식물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해양 동식물상	· 계획대상지 경계기준 2.0km 내	· 계획시행시 해양동·식물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 자산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 자연환경자산 변화 예상 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 지질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 계획 시행시 조간대, 갯벌, 해안선 등의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 지형변화 및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수환경의 보전	해양물리	· 계획대상지 경계기준 2.0km 내	· 해수유동, 침식 및 퇴적, 해수 교환율 변화 등으로 해양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해양수질 및 퇴적물	· 계획대상지 경계기준 2.0km 내	· 계획 시행시 부유사확산 등 해양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 계획대상지 인근 기상대	· 계획대상지와 가장 인접하여 위치한 기상대
			대기질	· 계획대상지 경계기준 1.0km 내	· 건설공사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온실가스	· 계획대상지	· 공사장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소음· 진동	· 계획대상지 경계기준 0.5km 내	· 건설장비 가동시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 공사인원 및 공사장비로 인한 오수 및 폐기물 발생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 공사인원 및 공사장비로 인한 각종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계획대상지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				

주) 평가서(초안)시 부유사 확산모델을 통한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지역을 재설정 할 계획임



(그림 3.2-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3.3 평가항목별 예측·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예측·평가방법 및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음

<표 3.3-1> 평가항목별 예측·평가방법 및 관련자료

분 야	평가항목	예측·평가방법	관련자료
<input type="checkbox"/>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동·식물상	· 육상 및 해양동·식물상 분류군별 현황 조사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전국 자연환경조사, 생태·자연도, 해양생태도 등)
	자연환경 자 산	· 자연환경자산 분포 및 영향 검토	· 관련 법령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계획내용, 현지조사, 문헌자료 등을 참조하여 지형변화 분석	· 지형도 및 지질도, 수심도 · 사업계획(평면 및 공사계획)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변화 예측	· 현지조사 및 경관 분석
수환경의 보전	해양물리	· 해양환경 변화 분석	· 수치모형실험
	해양수·저질	· 해양환경 현황 분석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input type="checkbox"/>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분석	· 기상연보
	대기질	· 계획대상지 주변 대기질 현황분석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 대기확산모델(AERMOD) 실험	· 배출량 자료(US EPA) · AERMOD Manual
	온실가스	· 투입장비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및 관련지침
	소음·진동	· 계획대상지 주변 소음·진동 현황분석 · 공사시 건설장비의 소음·진동 발생 특성 및 거리감쇠식에 의한 영향예측	· 문헌조사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 건설기계류 소음특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통계자료를 통한 폐기물 발생추이 분석 · 폐기물 원단위 적용을 통한 발생량 예측	· 통계연보 ·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건설공사표준품셈
<input type="checkbox"/>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사업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파악, 토지이용변화 예측	· 사업계획 및 상위계획

제4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4.1 주민의견수렴 개요

- 본 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직·간접적 영향을 도출하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중앙일간지 및 지방일간지에 신문공고 후 주민설명회 및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협의기관과 협의를 실시토록 할 계획임

<표 4.1-1> 주민의견수렴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 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 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공람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2 의견수렴계획

가. 지역주민 의견수렴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본 계획의 수립기관인 해양수산부의 누리집, 신문공고(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등) 및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고할 계획임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누리집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계획대상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등에 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공람장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할 계획임

3)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평가서(초안) 공람 기간 중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설명회 장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결정할 계획임
-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에 계획의 개요, 주민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이며, <표 4.2-1>의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표 4.2-1> 공청회 개최조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 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경상남도, 통영시), 승인기관의 장(해양수산부), 협의기관의 장(환경부), 지방환경관서의 장(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검토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4.3 의견수렴결과 등 공개

- 공개기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 14일 이상 게시
- 공개장소
 - 시·군·구 또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공개내용
 -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